

경실련 운동과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경실련운동

- 1) 왜 “경제정의”인가?
- 2) 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
- 3)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 : 자유, 평등, 민주

2. 경제정의실천을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

- 1)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구축
- 2)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변화방향

| 대표집필* |

권영준(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 이 글은 경실련 정책위원회가 양혁승(연세대), 김호균(명지대), 김종걸(한양대), 홍종학(경원대), 황도수(건국대), 이의영(군산대) 교수 등으로 소위를 구성하여 수차례 내용 토론을 진행한 후 권영준 교수가 대표집필 한 것이다.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경실련

1) 왜 “경제정의”인가?

2009년 올해로 경실련이 창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다 같이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시민운동의 초석을 놓은 지 벌써 20년이다. 옛말대로라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다 같이 잘사는 사회로 변했는지를 반추해 보면 매우 회의적이다.

경실련은 때로는 한국적 정치 현실의 한계로 좌절하기도 하고 구조적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경실련이 지난 20년 동안 펼쳐왔던 운동들은 금융실명제처럼 제안 당시에는 성과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러나 역사는 우연을 매개로 필연을 달성하는 과정이라는 역사학자 E.H. Carr의 말처럼, 경실련이 주장한 개혁과제들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들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과 시민들의 따뜻한 심성을 근간으로 하는 경실련운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

경실련 창립 당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였으며, 경제정의 실현은 시민운동이 떠안게 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경제정의는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그 어떠한 정의도 그 속을 한 꺼풀씩 벗겨보면 결국 경제정의로

귀결된다.

경실련이 지향하는 경제정의는—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경제제도, 극심한 소득격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해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경영 불투명성, 부패와 사치·향락, 환경파괴 등—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적 公義(Economic Public Justice)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로는 첫째,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둘째,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하며, 셋째,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넷째,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고, 다섯째,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하고, 여섯째,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투기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경제정의는 서구 선진국의 2,000여 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그들의 핵심 가치관의 근본바탕인 성경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예일대학 원장이자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도 경제정의는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건이나 구제로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제도개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실질적 제도개혁에 의한 진정한 경제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양극화와 사회분열 현상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맴돌며 뒷걸음치고 있는 한국경제도 경제정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의 의미는 근로소득자가 불로소득자보다 더 대접받고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뜻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선취해서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을 꾀하는 자들이나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가 더 이상 발붙이고 큰소리치며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가”는 낙오자 없는 패자부활의 활기찬 사회를 말한다. 사업이나 취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자녀의 교육비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서 큰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고,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더불어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함께”라는 것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규칙 제정과 법치가 상식이 되고, 따뜻한 나눔운동이 문화가 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운 민주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잘사는”의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공동체”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개성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사회를 뜻한다.

2) 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해졌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 관료, 정치세력의 유착구조가 공고화되어 개혁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집권 시기)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긴 했지만 실업문제가 큰 이슈는 아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 위기의 심각한 뇌관이 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계층의 총소득을 하위 20% 소득계층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은 1997년 4.09배에서 1999년에는 5.13배로 높아졌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무려 8.67배로 치솟았다. 이처럼 소득격차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자산의 양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 금융 및 거래제한 완화 등 부동산 분야의 각종 규제완화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기업도시 등 전국적인 개발계획은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거나 항상 뒷북을 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놓아 결국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다.

부동산투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민생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자산 5분위 배율(상위 20%에 속하는 사람

들 자산의 평균금액을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 자산의 평균금액으로 나눈 값)은 2005년 기준으로 19.5배였다. 이는 2008년 소득 5분위 배율인 8.67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양극화가 더 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오히려 심화되었다. 한국의 재벌들은 탄생부터 권위주의 정권이 추구하는 압축성장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시장권력으로 서 그 막강한 힘을 유지하게 되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의 중도 진보정당하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결코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 재벌들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시장지배력이 대폭 확대되고 경제력 집중이 사상 최고조에 달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들의 영향력은 시장권력 차원을 넘어 정치·행정·사법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는 반개혁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재벌개혁의 5+3원칙(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채무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의 5개항과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개항)이 재벌들의 반발과 재벌에 포위된 관료와 보수언론의 경제위기에 부딪혀 좌초한 이후, 사실상 한국경제에서 재벌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었다.

서민들의 힘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벌개혁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 재벌들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은 자주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정도로 경제문제를 재벌들에게 의지하였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의 민주정부들은, 김영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단기적 경제회복의 과제’와 ‘장기적 구조개혁의 과제’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에는 관료들의 관성적 현실인식과 재벌들의 시장지배 권력에 굴복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수많은 개혁조치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반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와 타협함으로써 재벌개혁을 포기하였다. 또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개혁마저 포기하고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던 개혁실패 사례에서 나타났듯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것은 5년 단임

제 체제하에서 일시적 경기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와도 직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 정부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과 아울러 임기 내에 증권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제의 완전 포괄화 등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재벌들의 시장권력에 포위되어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 등에 에너지를 집중한 결과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전임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대통령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자평했듯이 자본시장의 급속한 개방, 한미 FTA 추진 등 다양한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처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감독부처의 수장에 노무현 정부와는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들을 기용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 재벌편향적이었던 어떤 보수적 정부에서도 내놓고 추진하지 못했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와 자본시장통합법 처리를 강행하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반개혁적 조치를 사실상 입안(결국 이때 피운 금산분리 완화의 불씨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금산통합에 가까운 엄청난 반개혁적 법률 개정이라는 대형화재로 연결됨)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노무현 정부는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학수고대했지만, 재벌들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국 소극적인 투자 행태를 취하였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이 높았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부가 국민민복을 위한 시장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국민들은 10년간 중도 진보를 표방하며 집권했던 정당인 민주당(새천년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포함)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높은 이상과 비전도 구호로 그치거나 행동 없는 비판으로만 그친다면, 그래서 개혁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경실련도 새로운 시민운동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3)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민주

경실련의 목표인 경제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 가치는 “자유,

평등, 민주”이다.

첫째, 자유이다. 자유는 남에게 구속되거나 간섭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열매를 맺는 가장 바람직한 요건이지만, 경실련이 추구하는 자유는 가진 자들을 위한 무제한적 신자유(Neo-liberal)가 아니고, 타인이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No-harm principle) 안에서 얼마든지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진보한다는 믿음(liberal progress)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누리는 자유야말로 경실련이 추구하는 자유이다.

경실련이 추구하는 자유의 지향점은 “공정한 시장의 규칙이 준수되는 자유롭고 강한 시장경제”이다. ‘공정한 시장 규칙의 준수’에서 ‘공정한’의 의미는 정책집행과정(Policy-administering-process)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과정(Law-making-process)에서도 시민들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후적 평가와 심판과정인 사법제도의 공정성이 투명하게 반영되어, 부패로 물든 전문가들의 담합과정과 이념적 편향성이 배제된 공의(公義)가 살아 숨쉬고, 원칙과 신뢰가 담보되는 그러한 규칙을 의미한다.

‘자유롭고 강한 시장경제’에서 ‘자유롭고 강한’의 의미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모든 사회적 제도가 진취적이고 선진화됨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제도의 수월성과 형평성이 균형 있게 개혁되어 빈부의 세습 고리를 끊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세대간 발전적 계승이 이루어져 성장잠재력이 더욱 증대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경실련이 말하는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뜻한다. 지난 시기의 세계경제 인류사를 돌아켜볼 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과 중요성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입증되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사학자인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지난 500여 년의 역사에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 내린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인류가 만든 사회제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도가 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임을 경실련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250여 년 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사가 말해 주듯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치달아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할 정도가 되면 반드시 공황이나 경제위기로 이어져 시장경제는 큰 역경을 초래한다. 시장경제가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한몸으로 발전할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성장친화형 진보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회의 그늘 어딘가에 사회적 약자(弱者)와 패자(敗者)를 무수히 만들게 되어 내부적인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세계적 선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드높이는 정책과 문화 창달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멀리는 막스 베버(Max Weber)로부터 가까이는 현존하는 세계 제1위 부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정치·경제·사회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가치 보전을 필수로 하는 건전한 자본주의 철학을 갖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론(Creative Capitalism)’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이 추구하는 시장경제 역시 ‘공동체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자본주의적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합리적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이다.

둘째, 평등이다. 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는 어떻게 인간이 자유와 동시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가를 찾는 과정이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만인평등설’과 ‘법 앞에 평등권 보장’ 등의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유엔 인권헌장 25조에 명기된 천부인권이나 천부의료권, 천부교육권, 천부민생권 등도 인류 보편적 권리로 공감하게 되었고, 천부행복권이 평등의 최종목표가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평등의 개념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본원적 평등이다. 모든 사람이 인격과 가치에서 완전히 평등하므로, 신분·재산·성별·인종·종교·지식·지역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천적으로 평등하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둘째는 사회적 평등인데, 이는 본원적 평등이 사회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법적 차별 금지), 정치에서의 평등(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평등), 인식에서의 평등(본원적 평등이 옳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경제적 평등인데, 이는 경제적 결과로서의 소득과 분배의 평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원적 평등은 자유의 원천이고, 사회적 평등은 자유의 실천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유와 상충되는 바가 없는 반면에,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 처분이나 계약 등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상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자유와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국민들이 근면하게 노력하여 귀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경쟁에서 탈락하는 패자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이 언제나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의 도움과 제도적 지원을 받아 스스로 노력할 경우 재회와 도약이 보장된 복지공동체가 평등사회의 요체임을 강조한다.

또한 지난 근현대사에서 서구와 동구가 공히 범한 이념적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서구는 불평등의 대가를 치루고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을 가난의 굴레에 방치하였고, 동구는 자유라는 대가를 치루고 평등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전제정치의 불평등한 횡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남북 대치상황에서 이념적 갈등이 증폭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정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속에서 정의가 공동체의 평화와 만날 수 있다는 신념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실련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는 민주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말한다. 경실련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다.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 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대로 잘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실질적 자유민주주의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경제부문에서의 민주화는 더욱 그렇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거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문제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및 지배주의 전횡과 이를 보호하려는 정치권, 언론, 사법부 등과의 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제도개혁과 정책개발, 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직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대표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태생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불리오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의 보완 및 참여가 절실하다. 다만, 직접 민주주의의 균중심리와 익명적 무책임성,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 단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혁명의 진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민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간접 및 직접 민주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은 필수적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경험하고, 미국 노동운동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세포 마디마디를 이해했던, 한 시대의 증인이자 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정의'를 향한 인간의 양심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불의를 향한 인간의 속성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명료하게 설파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본적 원리를 내포하는 민주주의를 대신할 어떠한 정치사회 제도도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2. 경제정의실천을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

1)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구축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천을 통한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 복지, 환경 및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서고 동시에 시장 참가자들 모두가 스스로 자립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가 확립된 바탕에서, 실질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경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복지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안정되고 희망찬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패자부활 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은 자는 누구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한다.

셋째, 환경파괴는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친환경 산업가치의 증진을 통해 친환경공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물질 풍요만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국가시스템, 정직과 감사가 기본 정신문화가 되는 선진시민사회, 세계를 향해 문화적으로 개방되면서도 우리의 고유전통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평화적 문화 창조사회, 고품격 문화선도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열린 언론사회, 사회지도층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도덕적 주도권을 통해서만 신뢰가 주어지는 진정한 법치사회 등이 포함된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시장, 복지, 환경 및 사회”는 현재의 천민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앞서서도 언급한 “합리적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이란 말은 과거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과거 복지국가는 정부를 과신하여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는 방안을 소홀히 하였다.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부의 투명성과 언론자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여 시장의 생산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빈부격차와 절대빈곤의 발생, 실업과 불황의 발생, 독과점의 횡포, 환경파괴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적절한 정부 개입으로 시정하는 혼합경제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는 과거 서구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났던 과도한 정부개입이나 관치경제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구시대적 개발모형을 뒤엎고 있는 중상주의적 통치사상으로 인한 정부실패도 배격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신자유적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시장의 실패도 거부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규제 및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언제나 시장개입에 대한 과도한 유혹을 갖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언론이 감시와 비판이라는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시장의 실패에도 항상 감시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시장의 유착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최근 언론이 사회적 공器(公器)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언유착이나 경언유착을 통해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죄악을 목도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몰락이 예견되는 통탄을 금치 못할 때도 있다.

합리적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는 정직과 신뢰라는 근본적인 가치관하에서 정부와 시장

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공동체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2)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변화방향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민주정부, 강하고 건전한 기업, 열린 세계문화시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섬기는 정부라야 한다. 국민을 선거 때에만 투표권을 가진 일시적 주권자로 인정하는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무수히 발생시켜 중국에는 불행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하며 여론조사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편의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특히 민주화 이후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모든 정부가 예외 없이 임기 말에 불행을 겪게 된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진정성이 없고 본의든 타의든 간에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층만을 대표하는 정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다 같이 잘사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건전한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해하기 쉽게 잘못 남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재벌과 기업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재벌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집단적 기업구조 속에서 총수가 존재하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 산업화 단계에서부터 정경유착적인 특수한 형태의 기업집단인 재벌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이러한 기형적 산업조직의 특이성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2003년도에 창립 160주년을 맞는 영국의 저명한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는 “Pro-Market, not pro-business”라는 제목의 특집 사설에서 친시장이 아니고 친기업적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정경유착의 폐단과 심각성을 영미식 경제사회(뉴딜정책 이전에는 영미국가에도 우리의 재벌들과 유사한 폐쇄적 기업지배계층이 존재하여 경제사회적 문제가 많았음)의 오랜 경험에서 지적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처럼 기형적이고도 공고한 재벌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친기업적 정부라고 주장하는 정권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결코 작지 않음(출자총액제

한제 폐지, 금산분리 대폭 완화, 기형적 지주회사 허용 등)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친재벌적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친기업적 정부 역시 태생적 구조로 인해 저지를 수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 있는 비판을 지속해야 한다.

전경련과 일부 친재벌 언론들이 만들어낸 조어인 ‘반기업 정서’라는 실체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중에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불공정 행위를 범하거나 불법·탈법적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반기업 정서라는 말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반기업 정서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영혼을 훼손시키는 단어일 뿐 아니라 그 단어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결국 기업들이다. 치부를 감추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단어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기업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경실련이 바라는 강하고 건전한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배구조가 매우 건강한 독립된 기업이다. 노사관계가 튼실하고 안정되며 기술개발과 선제적 설비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수익성 높은 기업이며, 친환경적이고 공동체 발전에 정신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책임에 솔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근로자와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정한 경쟁시장에서 효율적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는 일반 기업(general enterprise), 둘째 평생고용 보장과 적절한 임금 지급을 통하여 자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기업(shared enterprise), 셋째 지난 30년간 거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회문제들을 기업적 창의성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조용히 진보해 왔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등이다.

공동체 기업은 노와 사가 모두 상대방을 상생의 동반자로 파악하고 기업을 자신이 평생 살아갈 공동체로 생각하게 되므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열성, 정직,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종업원들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경제의 큰 걸림돌인 노사갈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대기업이 그 해결에 실패한 환경파괴, 인권차별, 실업, 교육 불평등, 경제사회 양극화, 제3세계의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문제를 민간부문 스스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극 활용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면 “사회적 기

업이란 비즈니스의 파워를 이용하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Use the Business Power to Create the Better World)”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양면성을 가진 기업인데, 하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영리한 비즈니스적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적 방법으로 번 돈을 사회적 목적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인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21세기 들어서 신자유주의나 정글자본주의에 대한 기업적 대안 모델로서 놀라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UN이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같은 곳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들은 20세기 후반부터 무섭게 진보하여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 및 생산자 들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깊은 감동을 심어주는 바, 앞으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깊은 관심과 그들의 활동영역들이 더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열린 세계문화시민이어야 한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낌없이 발휘하고 집단적 소비자 행동이 필요할 때에는 멸사봉공하는 시민정신의 함양이 절실하다. 특별히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로서의 네티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비자주권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적극적 의사표현과 행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선진적 시민행동이 요구된다.

경영학의 사상적 대가였던 고(故)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박사는 정부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를 창출하는 부문이고, 기업은 개별상품과 서비스(Private Goods & Services)를 창출하는 부문인 데 비하여, 제3섹터인 NGO/NPO는 “변화된 사람(Transformed Person)을 창출하는 부문”이라고 하였다. 병원, 학교, 자선단체, 정책감시단체 등은 각각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문맹자를 식자(識者)로, 경제사회적 약자들을 자활의지와 역량 있는 자들로, 부패와 비리를 투명과 합리로 바꾸는 그런 변혁된 사람들을 만드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피터 드러커 박사는 21세기는 NGO/NPO의 역할이 가장 중시되는 시대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민과 시민운동은 바람직한 우리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그 역할이 크며, 이를 위해 스스로 자기변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크게 요청된다.